「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2호(2025. 8): 193-212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2 (August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2.9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 연구: 광역시-비광역시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 경 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만족도가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가 혁신도시 중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06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a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교통시설 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의 영향력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정주여건의 하위 요소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등은 비광역시에서만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주여건 만족도, 지역경제성장 인식, 지역 간 비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배민철 외, 2023).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역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의 하나이다(권영섭 외,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 본 논문은 2024년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2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전체 405개의 공공기관 중 85%에 해당하는 약 346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원희 외, 2015). 이에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고 통·폐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개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9년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마무리 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문윤상, 2021).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집중 인구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김민곤 외, 2017; 김태환 외, 2020; 문윤상, 2021), 지역 내 총생산(GRDP), 지방세, 사업체 수 및 고용자 수 등을 주요 분석 지표로 삼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 과정에 주목하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다(권영섭 외, 2015; 김윤서·김종진, 2016). 이러한 연구들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동반 가족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료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한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계량 지표에 의존하거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실제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전체 지역 인구 중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문윤상, 2021) 기관 이전 완료 후,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 역시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현황이나 GRDP의 증감여부 등 객관적인 계량 지표의 변화량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부산, 울산, 대구 등 광역시와 그 외 비광역시 지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광역시와 비광역시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부터 지역의 발전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안정근 외, 2021; 이동윤·정석, 2024).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이 진행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령, 일정 수준 이상의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광역시 주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곧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역시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도시 주민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혁신도시 주민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영향요인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

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결국 본 연구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지역 간 비교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어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시에는 응답에 대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고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별 문항을 통해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606명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결과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차이검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에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모델 분석과 지역을 구분한 분리 모델 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선진국 사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배준구, 2006).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런던의 인구 과밀 및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까지 총 40,900명을 이전하였다(Marshall et al., 2005). 또한 프랑스는 수도 파리 권역의 과잉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지방분산 계획을 준비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배준구, 2006).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배경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집중 인구의 분산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 혹은 혁신도시의 인구 증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인구 현황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권영섭 외, 2015; 이유철·김찬호, 2020). 인구 분산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이전이 완료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도권 집중 인구가 혁신도시로 분산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으나, 그 이후부터는 인구 분산 효과가 거의 없거나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한다(김태환 외, 2020; 문윤상, 2021). 한편, 배준구(2006)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파리 인구 집중 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은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효

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혁신도시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지역 내 총생산(GRDP), 지방세 징수액 등에 주목하고 있다(김준성, 2022; 변재연, 2016; 조규민·손동욱, 2020). 예를 들어, 김준성(2022)은 혁신도시의 종사자 수와 창업기업 수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였고, 조규민·손동욱(2020) 역시 종사자 수를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또한, 김민곤 외(2017)는 혁신도시의 지방세액과 1인당 GRDP 등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징수액이나 GRDP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시행 전에 비해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aggi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정책이 지역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전 지역 인근의 고용(주변 1~3km 지역)이 이전 지역 중심(주변 1km 이내)으로 이전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수도권 집중 인구의 분산과 지역경제성장 등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된 학술적인 배경에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김민곤 외, 2017).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국토교통부, 2016)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상 기대효과 중 하나로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는 등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지역경제성장으로 정의하였다. 즉, 혁신도시 주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는지, 이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역량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크게 재정역량과 인적 역량으로 구분된다(이학연, 2022). 먼저 재정역량과 관련해 강윤호(2008)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산시의 재정자립도 및 경제 관련 예산 규모가 지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수창·이환범(2017)의 연구에서도 예산 규모와 연구 관련 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인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총수가 증가하면 확률적으로 경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주원 외, 2021; Lobao & Kraybill, 2009; Sullivan, 2002).

둘째, 사회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지역의 인구규모나 노령인구는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요 이슈라 할 것이다. 우선 인구규모가 크면 지역의 시장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여겨진다(Glaeser & Gottlieb, 2009). 하지만 노령인구 비율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먼저, Maestas et al.(2016)은 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Park & Hewings(2009)는 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의료산업 발달과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지역의 정주환경 요소가 지역경제성장의 영향요인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교통시설 및 상업시설, 문화시설, 녹지공간, 의료시설 등 인프라 시설의 구축 수준이 지역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김경아, 2009; 이학연·김진덕, 2021; Nelson,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정주환경 이론에 따르면 정주환경의 차이는 지역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에는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상호·박시현, 2006; 이성우, 200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정호(2013)는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기반 시설의 구축 자체를 도시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국토교통부, 2016). 가령, 정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종합병원 신설 및 이전 지원 등 38개의 정부지원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들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역경제성장의 영향요인에 대한 지역 간 비교 논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인식 및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역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거주지역의 특성이 다르다면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경제성장 및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 역시 차이를 보일 것이다(이경영·박관태, 2022). 가령,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성장 효과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은 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 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지역 간 격차는 오랫동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문제 제기되어 왔다(안정근 외, 2021; 이동윤·정석, 2024).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 할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부, 2016).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설계되었으며, 크게 '기존 도시 활용형'과 '독립 신도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도시 활용형의 경우 도심 인근 지역에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부산, 울산, 대구, 경남, 제주 등이 해당된다. 반면에 독립신도시형은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혁신도시 지역 중 광역시는 기존도시 활용형으로, 비광역시는 대부분 독립신도시형으로 개발되었다(국토교통부, 2016; 정유선, 2020).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정주여건의 개선 효과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 여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혁신도시 중에는 지역 발전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광역시와 비광역시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는 개발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과 관련해 광역시와 비광역시 지역 주민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이들 두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만약 분석을 통해 요인 간 영향 관계가 차이를 보인다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H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의 영향은 광역시-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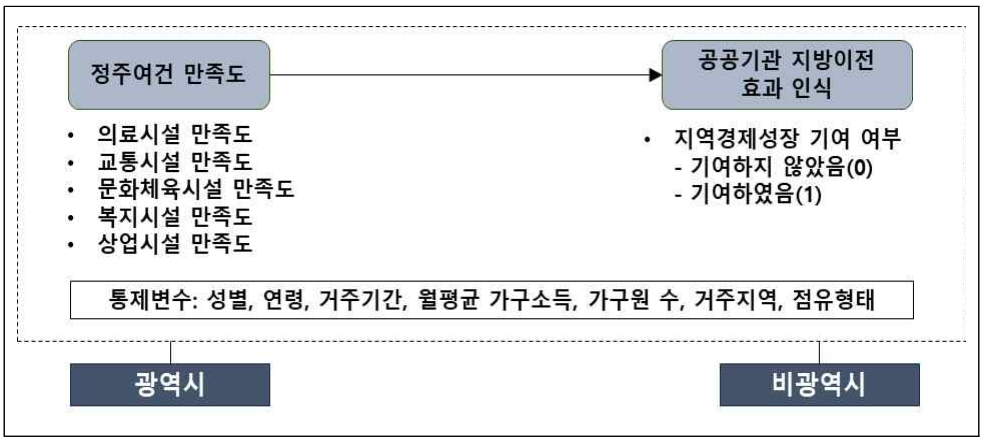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광역시 및 비광역시 등 거주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한 주민의 인식에 대해 이분형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주여건 만족도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의료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만족도 등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주환경의 차이는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김상호·박시현, 2006; 김정호, 2013; 이성우, 2001). 또한, 정부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동반 가족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였다(국토교통부, 2016; 이원회, 2015). 이러한 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고려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더욱 증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고 두 지역 간에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지역에 따라 발전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 수준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기여 여부 인식 역시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다(안정근 외, 2021; 이경영·박관태, 2022; 이동윤·정석, 2024).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역, 점유형태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지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조성된 혁신도시는 총 10개 지역이며, 이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14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완주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이전 규모가 크지 않고, 전북 완주군은 지리적 위치상 자료수집 과정에서 혁신 지구와의 관련성이 낮은 표본이 다수 수집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거주민 중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평가와 관련해 응답 편향(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9개 혁신도시에 속해 있는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이전 공공기관 종사와 무관한 거주민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선정질문을 통해 거주지 및 이전 공공기관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어 대상자들에게 조사 참여 링크를 발송하고, 거주 중인 시군구 및 연령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만 20세 이상의 전체 표본은 총 1,606명이며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남자(707명, 44.0%)보다 여자(899명, 56.0%)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광역시, 비광역시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60세 이상(539명, 33.6%)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는 40~49세(130명, 23.8%)와 50~59세(130명, 23.8%)가, 비광역시에서는 30~39세(225명, 2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기간별로는 15년 이상 30년 미만(442명, 27.5%)이 가장 많았으나, 비광역시 지역에서는 5년 이상 15년 미만(293명, 2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6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원 수 역시 4명 이상이 가장 많았다. 끝으로 주택 점유형태도 광역시 및 비광역시 모두 자가 거주자가 자가 외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 응답자 특성

		전체	거주지역	
			광역시	비광역시
전체		1,606 (100.0)	546 (100.0)	1,060 (100.0)
성별	남자	707 (44.0)	236 (43.2)	431 (40.7)
	여자	899 (56.0)	310 (56.8)	629 (59.3)
연령	20~29세	218 (13.6)	88 (16.1)	183 (17.3)
	30~39세	231 (14.4)	98 (17.9)	225 (21.2)
	40~49세	299 (18.6)	130 (23.8)	54 (24.0)
	50~59세	319 (19.9)	130 (23.8)	206 (19.4)
	60세 이상	539 (33.6)	100 (18.3)	192 (18.1)
거주 기간	5년 미만	331 (20.6)	108 (19.8)	245 (23.1)
	5년 이상 15년 미만	413 (25.7)	138 (25.3)	293 (27.6)
	15년 이상 30년 미만	442 (27.5)	158 (28.9)	282 (26.6)
	30년 이상	420 (26.2)	142 (26.0)	240 (22.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21(7.5)	37 (6.8)	70 (6.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 (18.7)	103 (18.9)	187 (17.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4 (17.7)	90 (16.5)	194 (18.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46 (15.3)	83 (15.2)	169 (15.9)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58 (16.1)	89 (16.3)	174 (16.4)
	600만원 이상	397 (24.7)	144 (26.4)	266 (25.1)

가구원 수	1명	243 (15.1)	76 (13.9)	167 (15.8)
	2명	381 (23.7)	122 (22.3)	259 (24.4)
	3명	446 (27.8)	174 (31.9)	272 (25.7)
	4명 이상	536 (33.4)	174 (31.9)	362 (34.2)
점유 형태	자가 외	465 (29.0)	149(27.3)	316 (29.8)
	자가	1,141 (71.0)	397 (72.7)	744 (70.2)

3.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하였다'와 '기여하지 않았다'의 이분형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고, '기여하지 않았다'(0)를 참조 범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주여건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하위 요소로 의료시설 만족도, 교통시설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복지시설 만족도, 상업시설 만족도 등을 고려하였다. 각각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시설 만족도는 동네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대학병원·종합병원, 약국 등으로 구성하였고, 교통시설 만족도는 자전거, 보행로, 기차, 도로 접근성, 시외/고속버스, 주차장, 택시, 시내/마을버스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 만족도는 실내 체육관, 공연/전시장, 휴양지 및 관광지, 실외운동장, (공공)도서관, 녹지공간 및 공원 등을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고, 복지시설 만족도는 노인정,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돌봄센터 등 요양시설,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시설,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상업시설 만족도는 찻집 및 카페 등, 슈퍼마켓/식료품 상점, 식당 및 음식점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밖에 성별, 연령,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동거 가구원 수, 거주지역, 점유형태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정주여건 만족도는 복수의 설문항목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와 설명변수 간의 내적 타당도 및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였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응답 빈도 및 평균값이 이들 두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이분형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a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분형으로 구성되었을 때 사용하는 확률선택모형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Exp(B) 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비광

역시 거주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광역시와 비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 복수의 측정항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고 내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표 2〉). 탐색적 요인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개별 항목들이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적 타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시 주성분 요인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총 26개 항목에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먼저 KMO(Kaiser-Meyer-Olkin)가 0.942,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1]. 또한, 개별 요인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고유값은 1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요인에 대한 구성 항목의 내적타당성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2].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요인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크론바흐알파 값(Cronbach α)을 통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크론바흐알파 값이 0.6을 상회하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George & Mallery, 2003),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0.7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변수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비고
정주 여건	의료시설 만족도	동네의원(외래중심)	0.802	고유값=3.728 Cronbach's α=0.886
		치과병·의원	0.794	
		한의원(한방 병원)	0.721	
		대학병원·종합병원	0.680	
		약국(한약국 포함)	0.679	
	교통시설 만족도	자전거	0.671	고유값=3.538 Cronbach's α=0.837
		보행로	0.648	
		기차	0.602	
		(고속) 도로 접근성	0.596	

1) KMO가 0.5이상일 경우 해당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훈영, 2015).

2) 요인적재값은 0.4 이상, 고유값은 1이상일 경우 내적타당성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임지훈, 2017).

	시외/고속버스	0.596	
	주차장	0.564	
	택시	0.554	
	시내/마을버스	0.551	
문화 체육 시설 만족도	실내체육관	0.733	고유값=3.447 Cronbach's α=0.846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0.716	
	휴양지 및 관광지	0.714	
	실외운동장	0.680	
	(공공) 도서관	0.632	
	녹지공간 및 공원 등	0.480	
복지시설 만족도	노인정,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0.785	고유값=3.080 Cronbach's α=0.885
	돌봄센터 등 요양시설	0.770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시설	0.735	
	청소년 회관 등 청소년복지시설	0.703	
상업시설 만족도	찻집, 카페 등	0.729	고유값=2.674 Cronbach's α=0.794
	슈퍼마켓/식료품상점	0.645	
	식당, 음식점	0.615	

*KMO=0.94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유의도=0.000

2. 기술통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등을 확인하였다(〈표 3〉). 먼저 정주여건 만족도에서는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92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의료시설 만족도 2.704점, 교통시설 만족도 2.60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체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복지시설 만족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2.41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하였음'이 51.9%, '기여하지 않았음'이 48.1%로 '기여하였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기술통계분석

정주여건 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의료시설 만족도	1,606	2.704	±0.647	1	4
2	교통시설 만족도	1,606	2.602	±0.571	1	4
3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1,606	2.410	±0.631	1	4
4	복지시설 만족도	1,606	2.432	±0.637	1	4
5	상업시설 만족도	1,606	2.928	±0.560	1	4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n	기여하지 않았음		기여하였음	
1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1,606	48.1%		51.9%	

3. 차이검증

본 연구의 [가설 2]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의 영향이 광역시 및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인식이 이들 두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표 4〉). 우선 지역개발 기여 여부 인식은 이분형의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응답 비율에 대해 카이제곱(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17). 분석 결과, '기여하지 않았음'은 광역시에서 54.6%로 비광역시 4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여하였음'은 비광역시에서 55.2%로 광역시 4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의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주요 요인에 대한 광역시-비광역시 간 차이 검증

구분		거주 지역		χ^2/t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지역개발 기여 여부 인식	기여하지 않았음	54.6%	44.8%	χ^2=13.771***
	기여 하였음	45.4%	55.2%	
의료시설 만족도		2.768	2.670	t=2.961***
교통시설 만족도		2.686	2.558	t=4.258***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2.413	2.408	t=0.145
복지시설 만족도		2.396	2.450	t=-1.636
상업시설 만족도		2.916	2.934	t=-0.605

*p〈0.1, **p〈0.05, ***p〈0.01

다음으로 정주여건 만족도의 개별 요인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차이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시설 만족도 및 교통시설 만족도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의료시설 만족도는 광역시에서 2.768점, 비광역시에서 2.670점으로 광역시가 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통시설 만족도 역시 광역시가 2.686점으로 비광역시 2.558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대한 인식 및 정주여건 만족도 중 일부 요인이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정주여건 만족도가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광역시 및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한 타당성을 증대시킨다.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거주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영향력이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a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이하 '전체 모델')과 광역시-비광역시를 분리하여 개별 분석(이하 '분리 모델')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전체 모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정주여건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교통시설 만족도 및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복지시설 만족도 등 3개 요인이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시설 만족도는 한 수준 높아질 때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1.81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시설 만족도는 한 수준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에 대한 인식 확률이 1.48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신뢰수준 90%에서 한 수준 증가할 때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1.228배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p(B) 값을 기준으로 개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교통시설 만족도, 복지시설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주여건의 일부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들은 지역의 정주환경 요소가 지역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김경아, 2009; 이학연 외, 2021; Nelson, 2009), 김정호(2013)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구축 등 정주환경의 요소들이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등이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1.6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한 타당성을 더욱 증대한다.

〈표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1) 전체 모델[3)]

변수		B (S. E.)	Exp(B)
정주여건 만족도	의료시설 만족도	0.044 (0.114)	1.045
	교통시설 만족도	0.595 (0.134)	1.813***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0.205 (0.115)	1.228*
	복지시설 만족도	0.394 (0.113)	1.483***
	상업시설 만족도	-0.038 (0.123)	0.96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ref. 남자): 여자	-0.155 (0.110)	0.857
	연령	0.009 (0.004)	1.009**
	거주기간	-0.001 (0.000)	0.999*
	월평균 가구 소득	0.110 (0.036)	1.116***
	동거가구원 수	0.014 (0.051)	1.014
	점유형태 (ref. 자가 외): 자가	-0.016 (0.128)	0.984
	거주지 (ref. 광역시): 비광역시	0.496 (0.113)	1.642***
상수항		-4.228 (0.494)	0.015***
표본수		1,606	
모형적합도	χ^2	163.722***	
모형설명력	-2 log 우도	2060.424	
	Cox와 Snell의 R2	0.097	
	Nagelkerke R2	0.129	

*p〈0.1, **p〈0.05, ***p〈0.01

다음은 분리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표 6〉). 먼저, 광역시에서는 정주여건 만족도 중 복지시설 만족도만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한 수준 높아질수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1.623배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앞의 전체 모델 〈표 5〉와 비교해보면 〈표 6〉의 분리 모델에서 복지시설 만족도의 영향력(B값)이 0.394에서 0.484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 지역에서 복지시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광역시에서는 교통시설 만족도, 복지시설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순으로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시설 만족도의 경우 Exp(B) 값이 2.122로 다른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앞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모델의 분석결과 〈표 5〉와 비교해보면, 교통시설 만족도의 영향력(B값)이 0.595에서 0.752로 분리 모델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곧 비광역시 지역에서 교통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시설

3)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대리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본 연구에서는 1.033~2.03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 역시 전체 모델(B=0.205)에 비해 분리 모델(B=0.249)에서 그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크지는 않았다.

그 밖에 비광역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통제변수 중 성별,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남자 대비 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할 확률이 0.731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 확률이 1.010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 확률이 1.124배 증가하는 것는 검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주여건 만족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광역시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대해 복지시설 만족도가 중요할 수 있으며, 비광역시는 교통시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광역시 및 비광역시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평가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2) 분리 모델

		광역시		비광역시	
		B (S. E.)	Exp(B)	B (S. E.)	Exp(B)
정주 여건 만족도	의료시설 만족도	0.161 (0.207)	1.175	-0.022 (0.139)	0.979
	교통시설 만족도	0.322 (0.228)	1.380	0.752 (0.168)	2.122***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0.116 (0.200)	1.123	0.249 (0.141)	1.283*
	복지시설 만족도	0.484 (0.189)	1.623**	0.337 (0.142)	1.401**
	상업시설 만족도	-0.030 (0.211)	0.970	-0.005 (0.153)	0.995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ref. 남자): 여자	0.107 (0.184)	1.113	-0.314 (0.139)	0.731**
	연령	0.006 (0.007)	1.006	0.010 (0.005)	1.010*
	거주기간	-0.001 (0.001)	0.999	-0.001 (0.000)	0.999
	월평균 가구 소득	0.086 (0.061)	1.090	0.117 (0.045)	1.124**
	동거가구원 수	-0.009 (0.091)	0.991	0.031 (0.063)	1.031
	점유형태 (ref. 자가 외): 자가	-0.056 (0.222)	0.946	0.011 (0.158)	1.011
상수항		-3.466 (0.772)	0.031***	-3.407 (0.553)	0.033***
표본수		546		1,060	
모형 적합도	χ^2	37.694***		120.808***	
모형 설명력	-2 log 우도	714.638		1337.228	
	Cox와 Snell의 R2	0.067		0.108	
	Nagelkerke R2	0.089		0.144	

*p〈0.1, **p〈0.05,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 효과와 관련한 혁신도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경제성장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이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교통시설 만족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 복지시설 만족도 등 3개의 요인이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교통시설 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정주여건 만족도가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광역시의 경우, 정주여건 중 복지시설 만족도만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광역시는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만족도가 지역경제성장 기여 여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계량 지표에 주목하거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권영섭 외, 2015; 김민곤 외, 2017; 김윤서·김종진, 2016; 김태환 외, 2020; 문윤상, 2021).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정책에 대한 해당 지역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동반 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혁신도시 조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주여건 점검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적 목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닐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듯이 간접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정주환경의 차이가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김상호·박시현, 2006; 이성우, 2001). 본 연구에서는 정주여건 중 교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대상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이를 반영한 개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령, 중앙정부는 정책의 설계와 조정, 재정 지원 및 제도 마련 등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전략 수립과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광역시 및 비광역시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는 거주지역에 따라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 수준이 달랐기 때문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하다면 모든 대상 지역에 일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광역시의 경우 주민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성과 직결되는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광역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두 지역 간의 표본 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표본 크기의 차이는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균형을 고려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주환경 이론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주여건 만족도와 지역경제성장 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이론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모형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한 분리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 추가 변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호. (2008).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365-381.

국토교통부.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 세종: 국토교통부.

권영섭·김진범·하수정·현태환·김가연.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김경아. (2009). 창조산업 기업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87-208.

김민곤·박지형·송용찬. (2017).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4): 335-366.

김상호·박시현. (2006). 한국 시·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1): 1-24.

김윤서·김종진. (20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4(4): 73-90.

김정호. (2013).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219-240.

김준성. (2022).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6(2): 119-145.

김태환·민성희·김은란·서연미. (2020).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Brief」.

문윤상. (202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KDI 정책포럼」. 283호.

변재연.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배민철·안정근·정재한·김동인. (2023).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지역균형발전방안 인식연구. 「주거환경」. 21(3): 1-21.

배준구. (2006).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방정부연구」. 9: 171-189.

안정근·고윤석·김동근. (2021). 지방중소도시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 연구. 「주택도시금융연구」. 6(1): 23-37.

이경영·박관태. (2022).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2): 203-230.

이동윤·정석. (2024). 중소도시 입지형 혁신도시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총인구 및 청년인구 순유입효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5(4): 57-74.

이성우. (2001).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계속이동과 회귀이동. 「한국지역개발학회」. 13(3): 19-44.

이수창·이환범. (2017).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29(2): 231-251.

이원희·하태욱·최현묵·이종원·조강주·김선덕·송미경.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유철·김찬호. (2020). 혁신도시 개발성과의 평가와 검증에 관한 연구: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1): 47-67.

이학식·임지훈. (2017). 「SPSS24 매뉴얼」. 서울: 집현재.

이학연·김진덕. (2021). 「지방정부 재정운영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 경기연구원.

이학연. (2022). 정책델파이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한국적 맥락에서의 요인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3): 51-82.

정주원·이준석·이학연. (2021). 지역경제 성장요인과 정책적 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

로.「한국행정연구」. 15(3): 35-59.

조규민·손동욱. (2020).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국토연구」. 107: 61-78.

Faggio, G., Schluter, T., & vom Berge, P. (2019).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Evidence from a German government move.* SERC Discussion Papers 0229, Spatial Economics Research Centre, LSE.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Glaeser, E. L., & Gottlieb, J. D. (2009). The wealth of cities: Agglomeration economies and spati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4): 983-1028.

Lobao, L., & Kraybill, D. (2009). Poverty and local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unity service provision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Growth and Change.* 40(3): 418-451.

Marshall, J. N., Bradley, D., Hodgson, C., Alderman, N., & Richardson, R. (2005). Relocation, relocation, relocation: assessing the case for public sector dispersal. *Regional Studies.* 39(6): 767-787.

Maestas, N., Mullen, K. J., & Powell, D. (2016).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No. w224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5(2): 306-332.

Nelson, R. R. (2009).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ark, S., & Hewings, G. (2009). Immigration, aging, and the regional economy.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1(3): 59-80.

Sullivan, D. (2002). Local governments as risk takers and risk reducers: An examination of business subsidies and subsidy control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6(2): 115-126.

이경영(李卿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기관 관리정책, 지역 간 비교, 조사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The perception of HRM, trust between employees, and organizational satisfaction in public institutions: The case of Korea"(2024, 제1저자), "전라북도 거주 여성 청·중년층의 지속거주의사 영향요인 탐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인식을 중심으로"(2024. 교신저자),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Gyeonggi Province, Korea: A Generational Comparison"(2023, 제1저자) 등이 있다.(theky0501@gmail.com)

〈논문접수일: 2025. 6. 23 / 심사개시일: 2025. 6. 23 / 심사완료일: 2025. 7. 30〉

Abstract

Community Responses to Relocation Policy Among Mid- and Long-Term Residen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Lee, Kyung-Young

This study examined how residents' subjective reaction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s in Innovation Cities affects their perceptions of the cities'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how this relationship differ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Innovation Cities.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id- and long-term residents of Innovation Cities, collecting responses from a total of 1,606 individuals.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various aspec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and welfare services faciliti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s of the policy's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satisfaction wit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howed a relatively stronger influence. Second,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cit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perceived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example, satisfaction with sub-elements such 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ly in non-metropolitan c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implications involving the public sector relocation should actively incorporate residents' feedback on living conditions in Innovation Cities and develop improvement strategies accordingly.

Key Words: public sector relocation, subjective reactions with residential environments, perception of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comparison, a binary logistic regression